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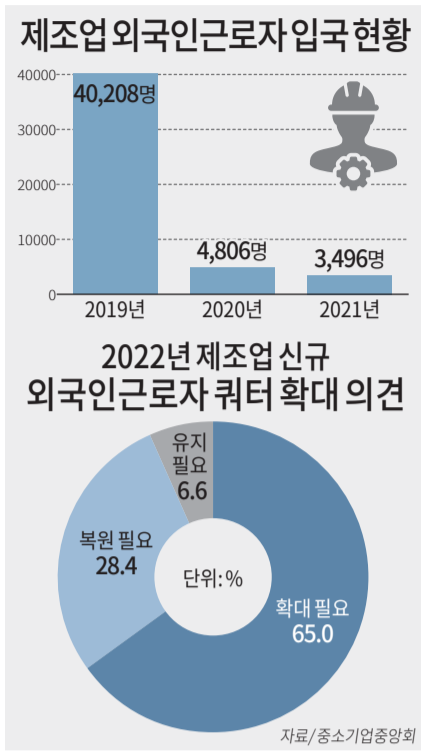
中企 10곳 중 9곳 인력부족... “외국 근로자 쿼터 확대 절실”

중기중앙회 제조업 인력 현황 조사
2019년 대비 체류인원 5.8만명 ↓
“추가적 체류기간 연장조치 필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현장의 인력 애로 해결을 위해 백신 접종 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 입국 허용 국가 확대 및 조속한 입국 절차 마련,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조기업 792개사를 대상으로 인력 현황 등을 조사해 12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2.1%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한데다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수

급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당시 4만208명에 달했던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엔 4806명으로 크게 줄었고, 올해엔 8월말 현재 3496명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16개국에서 한국에 근로자를 파견했지만 지금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6개국 근로자들만 한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한 실정이다.

입국 외국인근로자는 줄고, 4년10개월의 체류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인력이 많아지면서 E-9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은 2019년 말 당시 27만6755명에서 올해 8월말엔 21만8709명으로 5만8046명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안에 체류기간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조사에선 응답기업의 69.6%가 ‘체류기간 연장조치’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올해 연말 이후에도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95.3%의 기업들이 내년에도 추가적인 체류기간 연장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응답기업의 65%는 현재 연간 4만명 수준인 제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를 5만명까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검사, 백신접종 등이 이뤄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선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런 원칙 하에서 확보된 자가격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확보한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 시설은 총 900실 규모다. 이를 통해 수용 가능한 인원은 월 1800명 정도로 지금의 입국인원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입국전,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등 총 4회의 코로나19 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방역에도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외에도 중소기업들은 근무한지 1년이 안돼 이직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숙련도가 늘어날 시기에 체류기간이 끝나 인력 운영에 애로가 큰 만큼 문제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체류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정부·지자체, 中企 납품대금 지급 가능해진다

중기부 어음 대체수단 상생결제 도입
대금회수 지연·연쇄부도 해소 기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정부, 지자체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해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부도와 어음사기 등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해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사용하는 상생결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의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에 결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1차 협력사는 국가로부터 5일 이내 지급 수령이 가능해 할인을 제한한다. 다만 2차 이하 협력사는 할인이 가능하도

록 운영해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 신용도를 활용한 저금리 조기 현금화를 지원한다.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다. 이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결제시스템이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쇄부도 등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확보가 쉬워진다”며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말 현재 누적 총 620조2587억원이 상생결제로 지급됐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3년 연속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민간에서 상생결제가 꾸준히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 다. /김승호 기자



교원그룹은 12일 유튜브를 통해 교원예유의 디지털 학습지 ‘아이캔두’ 출시를 알리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교원그룹

교원그룹 빨간펜 메타버스-AI튜터 하나로 학습지 ‘아이캔두’ 출시

“지구온난화가 뭐예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입니다.” 메타버스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학생이 가상의 교사인 ‘OO쌤’에게 묻자 교사가 답한다.

교원그룹 빨간펜이 ‘알파세대’들을 위해 새로 선보인 디지털 학습지 ‘아이캔두(AiCANDO)’의 수업 모습이다. 아이캔두 개발에는 3년간 3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총 500억원의 연구개발(R&D)비가 들어갔다.

실제와 유사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메타버스 교실, 실제 인물을 통해 구현한 국내 유일의 ‘실사형 AI튜터’, 개인 수준별 맞춤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멀티모달 분석’ 등을 아이캔두에 두루 적용했다.

교원예유 이규진 미래콘텐츠연구실장은 “아이캔두의 차별화 포인트는 ‘멀티모달 분석’이라며 “학습 데이터와 비학습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초개인화 맞춤 학습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권칠승 “손실보상제 집행 위한 유기적 체계 구축 중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실보상금 준비 상황 점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지금까지 준비해 온 손실보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집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대전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대간담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를 연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행금지과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앞두고 현장 준비상황을 이날 직접 점검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한 세 가지 집행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의 자료를 적극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

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 신청자의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하게 지급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상공인 등이 손쉽게 제도를 안내 받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규모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앞선 지난 8일부터 전문 상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확대간담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담인력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채팅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계속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11월초 ‘위드 코로나’ 관측... 단계적 등교 확대 추진 /사진 뉴시스
- ▲ 민주당 “백신 접종자 자정까지 식당 이용 허용 추진”



- ▲ ‘세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 /사진 뉴시스
- ▲ 백신 접종완료 60% 돌파... 이달말 70% 전망

- ▲ 정부, 베트남·태국에 첫 백신 해외공여
- ▲ 서울시, ‘초·중·고 문화공연 관람’ 시행... 학급당 버스 1대 지원